『신앙과 학문』. 19(2). 125-147.

카이퍼의 식민지 정책관 : ‘윤리적 정책(ethische politiek)’의 의미와 한계*

이명헌**

논문초록

이 연구는 카이퍼의 저작과 연설을 통하여 그가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와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고(思考)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카이퍼는 죄로 인해 세계적 단일 국가는 불가능하며, 각 민족의 형성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네덜란드와 식민지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하였다. 동시에 그의 역사 중시 관점은 식민지를 본국의 ‘소유대상’으로 보는 현상유지적 사고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는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대해 해야 할 역할을 착취가 아닌 후견인 역할로 표현했으며, 그런 틀 속에서 중상주의적이면서 직접적 착취체계였던 경작체제와 자유주의적 식민지 정책 양자를 비판하였다. 그 비판은 윤리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경작체제에 대한 비판에서는 정부의 직접적 생산활동에 대한 개입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경제적 유인에 대한 그의 통찰이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유주의적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카이퍼는 그의 유기체론적인 사회관에 입각하여 자유주의적 고전파 경제학의 원자론적 세계관을 비판했으며, 자유주의 정책으로 초래된 자원 약탈의 문제점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후견인론은 단계론에 입각해서 식민지 원주민들 스스로의 산업화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교육과 자치조직의 발전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후자는 그의 영역주권론과 친화성이 높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카이퍼의 식민지 정책론은 식민지 현지인들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는 적극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미온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네덜란드 본국의 편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카이퍼, 식민지, 영역주권론, 후견인론, 경제정책, 경작체제

---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2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또한 이 논문은 2013년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중 한국기독교경제학회에서 필자가 발표했던 “카이퍼의 식민지 정책관: 기독교적 경제정책의 한계?”라는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4년 4월 28일 접수, 6월 2일 최종수정, 6월 3일 게재확정

I. 서론

네덜란드의 반(反)혁명당은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비록 카톨릭 정치세력과의 연정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실제정치 무대에서 장기적으로 집권에 성공한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예이다. 특히 그 정당을 처음부터 장기에 걸쳐 이끌고 총리 역임까지 했던 카이퍼는 걸출한 신학자이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현실 정치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살피는 입장에서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글은 카이퍼 당시의 네덜란드 경제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식민지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카이퍼가 어떤 원리와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식민지는 당시 서구 자본주의 국가 경제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한 인간 집단이 인종적으로 다른 집단을 강압에 기초하여 착취하는 체계이다. 즉,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노예제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일거에 청산할 수 없는 현실의 일부였지만, 당대에 이미 신앙적 혹은 윤리적 입장에서 적어도 사회 내 일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오늘날 사람들이 도달해 있는 사회적 조건과 일반적 윤리적 기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카이퍼가 어떠한 정책적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였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기독교 세계관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01년 카이퍼가 이끄는 반혁명당과 카톨릭 정당의 연립정부가 집권하고 그가 총리가 된 후 발표된 국왕의 시정연설(troonrede)에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지역의 식민지에 대해서 '도덕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한 이래로 일본의 침략과 종국적으로는 2차 대전 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식민지를 상실할 때까지, 네덜란드에서는 집권세력의 교체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른바 식민지에 대한 '윤리적 정책(ethische politiek)'이 추진되었다. 1901년 이전에도 정책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내에서 자유주의자들 중에도 견해를 피력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후에는 사회주의 정당에서도 나름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카이퍼와 그가 이끄는

반혁명당이 이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구체화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Kossmann, 1978: 405).

이 연구는 카이퍼의 저작과 연설을 통하여 그가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고(思考)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피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네덜란드와 식민지와의 관계, '바람직한' 식민지 정책이 갖추어야 할 성격, 목표, 그리고 정책수단에 대한 그의 생각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의 근본적 세계관이 식민지 문제에 대한 입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세계관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견해에 기초해서 다른 정파의 식민지 정책들을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살필 것이다. 또한, 그러한 그의 사고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검토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카이퍼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반혁명당이 행한 구체적 식민지 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당시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의 상황과 전반적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2장), 카이퍼의 식민지 정책론의 핵심인 '후견인론(後見人論)'의 중요 내용을 검토한다(3장). 이에 입각하여 그가 당시 다른 정파들의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비판하였는지를 검토하고(4장), 그의 후견인론에 기초하여 제시된 정책 목표와 중시된 정책 수단,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핀(5장) 후에, 요약과 결론을 내릴 것이다(6장).

II. 배경: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

17세기 번영을 누리던 네덜란드 경제는 18세기의 정체기를 거친 후 19세기 중반부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한 성장의 중요한 추동력이 바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더불어 식민지 경영이었다(Wintle, 2000: 82).

유럽의 '지리상의 발견' 시대 이후 17세기 전지구에 걸쳐 폭넓게 식민지를 경영하던 네덜란드는 18세기 영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식민지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였다. 나폴레옹 점령기 이후 비엔나 체제를 통해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민지를 상실했다. 이 자바 지역의 식민지 경영은 19세기 초반까지

는 네덜란드에 큰 이익을 주지 못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19세 중반부터 네덜란드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다(Wintle 2000: 214 이하).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 정책은 크게 3단계를 거친 것으로 정리된다. 183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는 이른바 경작체제(Cultuurstelsel)라는 직접적 착취 체계를 운영한다. 일종의 중상주의적(重商主義的) 수취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체제는 마을 경작지의 20%를 정부의 플랜테이션 작물(커피, 설탕 등) 재배에 돌리도록 강제하고 여기에 농지를 제공하지 못한 주민은 노동일의 20%를 그 플랜테이션 경지에서 노역(herendiensten)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 작물은 국영네덜란드 무역회사(Nederlandsche Handel-Maatschappij: 이하 NHM)를 통해 독점적으로 유럽시장에 판매되었고 거기서 발생한 익금은 네덜란드 국고로 귀속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수입은 네덜란드 재정에 매우 큰 기여를 하여 1850년 대 정부총수입의 40-50%를 담당할 정도였으며(Wintle, 2000: 221) 이렇게 확보된 재정수입은 이 시기에 행해진 네덜란드의 인프라 투자의 뒷받침이 된다. 이러한 경작체제는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식민지 경영의 모범사례로 연구할 만큼 '성공적'이었지만, 유명한 소설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Multatuli)'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듯이, 현지 식민지 통치기구 그리고 그것과 유착한 원주민 지배계급들의 수탈로 인해 하층민들은 빈곤과 기아 등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1870년대부터는 이러한 체계는 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대체된다. 농업법과 설탕법의 제정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플랜테이션 경영이 가능해졌고, NHM의 무역유통독점권도 해체되었다. 이에 따라서 식민지가 정부재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는 낮아졌지만, 네덜란드 해외 투자의 대상으로서 자바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네덜란드는 1873년부터 수마트라 북부의 아체 술탄왕국을 침략하여 그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아체 전쟁을 1914년까지 수행하였다. 군사적 확장과 민간투자대상으로서의 식민지의 중요성 증대가 이루어진 이 시기는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라는 평가를 받는다(Wintle, 2000: 216) 이러한 정책 변화를 이끈 기본적인 힘은, 그동안 진전된 네덜란드 국내 산업화로 축적된,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던 자본이었다(van Zanden and van Riel, 2000, 313). 이 시기의 정책을 자유주의적이라고 칭하지만, 현지 식민지 지배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아체 전쟁과 같은 군사적 침략을 통한 활동영역의 확보는 물론이고, 재산권과 거래 관련 법규와 관행이 유럽과 전

혀 다른 식민지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와 기업들이, 흔히 불공정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 식민지 행정기구의 지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van Zanden and van Riel 315-317).

세번째 단계는 1901년 카이퍼의 집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윤리적 정책(ethische politiek)'의 시기이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때까지의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네덜란드 본국만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식민지 원주민은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윤리적 반성 위에서 식민지 원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각종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입장은 반혁명당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이미 언급한 소설 '막스 하벌라르'는 사회 일반에게 식민지 운영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1], 원래 자유주의자였던 반 데벤터(van Deventer)가 1899년 월간지 '데 히즈(de Gids)[2]'에 게재한 '명예부채(Eereschuld)'라는 논설[3]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등(Kossmann, 1978: 403), 19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정책지향에 대한 수용성이 이미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카이퍼와 반혁명당도 1901년 집권 훨씬 전부터 도덕적 소명(zedelijk roeping)이라는 표현으로 네덜란드가 식민지 주민에 대해 모종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었고, 이에 기초하여 그 이전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행하고 있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식민지의 경제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필두로, 교육, 농업, 보건, 교통, 금융,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그리고 분권 및 자치를 위한 기구의 육성 등이었다(Kossmann, 1978: 412; van Zanden and van Riel, 2004: 318; de Jong, 2001: 178). 윤리적 정책의 기치 아래 시행된 정책들이 표방했던 효과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지만, 적어도 1904년부터 1차 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는 식민지에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대중의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Kossmann, 1978: 412)

---

1) 이 소설의 영향력을 강조하여 이 소설의 출간년도인 1860년이 바로 윤리적 정책의 '출생년도'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Fasseur, 2012: 1)

2) 길잡이(the guides)라는 의미임

3) 반 데벤터는 식민지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이 시점까지 네덜란드 정부가 1억 5100만 길더를 부정하게 식민지로부터 징수했고 3600만 길더를 오용했으므로 그 합산액을 철도, 항구, 관개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자본의 형태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단일하고 독립성을 가진 단위로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III. 카이퍼의 식민지 정책론의 기본입장: '후견인(後見人)'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혁명당은 윤리적 정책의 추진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카이퍼는 반혁명당의 최고지도자였고, 1901부터 4년간 총리로 재직하였지만, 구체적 식민지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는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다[4]. 그러나 그는 반혁명당의 이념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식민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 이념적 지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Koch, 2006: 463).

이하에서는 카이퍼의 정치관련 저작 중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강령』과 『반혁명당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카이퍼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사고를 살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주제에 대해서 그가 집권하기 직전인 1900년에 하원에서 행한 연설을 참고할 것이다.

1879년 발간된 카이퍼의 『우리의 강령(Ons program』은 일년 전에 채택된 반혁명당의 강령에 대한 해설집으로, 반혁명당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신문 스탄다르트(de Standaard)에 게재되었던 논설들을 모든 것이다. 이 논설은 강령의 전반부에 담긴 기본적 주제들 – 예컨대 기본 노선, 주권, 국가, 하나님의 통치(ordinantiën) – 에 대해서는 이론적, 신학적, 역사적 고찰을 주로 하고 있지만, 당시의 여러 구체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혁명당, 또는 카이퍼의 세계관 및 정치적 노선에 입각한 구체적 분석, 정치적 입장, 그리고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책의 19장이 식민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1879년 1월부터 2월까지 6회에 걸쳐 스탄다르트에 실렸던 논설을 모은 것이다. 다른 한편 『반혁명당의 정치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은 카이퍼가 총리를 역임하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원로정치인이 된 1917년에 발간한 저서이며, 1권 '원리'에서는 반혁명당의 정치관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2권 '적용'에서는 현실 정치 사안에 대해서 당시의 정세와 반혁명당의 입장을 반영하여 구체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2권의 21장 전체가 '식민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식민지 문제에 대한 다음의 반혁명당의 강령을 보면 반혁명당이 원칙의 면에서 당시의 경쟁하는 정치세력들의 정책들을 모두 비판하고 식민지 정책에서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1901년 이후 반혁명당의 식민지 정책을 이끈 사람은 알렉산더 이덴부르크(Alexander W. F. Idenburg)이며 그는 카이퍼 내각에서 식민부 장관을 지내고 그후 인도네시아 총독을 역임하였다.

식민지 문제에 관하여는, 식민지를 국가재정이나 민간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exploiteeren)려는 우리나라 정책의 이기적 경향을 도덕적 의무의 정책으로 대체해야 함을 고백한다[5].

이 표명은 1830년대 이래 국가 재정수입확보를 목적으로 보수파가 시행했던 '경작체제'와, 그것을 대체하여 등장한 1870년대 이래 자유주의자들이 기업들의 이윤확보의 장을 열어주고자 시행한 자유방임 원리하의 식민지정책, 이 두 가지 모두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대체할 정책의 이념으로 '도덕적 의무(zedelijke verplichting)'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카이퍼는 이미 이 강령의 채택보다 훨씬 전인 1874년 하원에서 당시의 자유주의 정부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며 행한 연설에서 이미 정부가 식민지에 대한 '도덕적 소명(roeping)'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질문한 바가 있었다.(Fasseur, 2012:1) 이것은 반혁명당이 1901년의 국왕시정 연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기 훨씬 전부터 식민지 정책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대해서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양자 간에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즉, 식민지를 식민지로 계속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그러한 의무를 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네덜란드와 식민지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자신의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인간이, 역사적 배경이 다른 국민들을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나 민족을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한 인위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 추구했고 실현했던 것으로, 비역사적이며 비신앙적(ongoddelijk)인 오류라고 본다. '하나의 민족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다(Kuyper, 1897: 957).' 그런 입장에서 네덜란드 본국과 인도네시아 각 지역을,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를 이루는 국가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명확히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실현된다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정치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이퍼는 유명한 『칼빈주의

---

5) Voor zooveel het koloniale vraagstuk aanbelangt, belijdt zij, dat de baatzuchtige neiging van onze staatkunde, om de koloniën voor de kas van den staat of van den particulier te exploiteeren, dient plaats te maken voor een staatkunde van zedelijke verplichting. (Kuyper, 1879: 955) (이하 네덜란드어 문장을 인용할 때 각주에 보인다.)

강연』(그가 프린스턴 신학 대학에서 1898년에 행한 강연)에서 죄가 없었더라면 인류의 유기체적 단일성이 정치적으로 단일한 세계 국가를 통해서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죄의 존재로 인해서 그러한 단일성이 해체되었다고 밝히고,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역사상 단일한 세계제국을 실현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된, 다수의 국가의 존재는 죄로 인한 어두운 결과인 동시에, 법과 정부의 존재와 같이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Kuyper, 2007: 79-81) 이와 같은 복수의 정치 단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사상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묶으려는 시도를 배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또한, 그는 인간에 대한 정치적 권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출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역설하고, 결국 그 권위가 어떻게 창출되는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분리된 개별 정치적 단위의 형성에 나타난다는 개념이 네덜란드와 식민지의 단일화라는 관념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카이퍼는 이 원리로부터 인도네시아 식민지가 네덜란드 본국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또는 조만간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식민지가 네덜란드 국가(rijk)의 자연스러운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주장과 더불어 식민지가 역사적 과정 —부분적으로는 정복에 의해서 그리고 주로 1798년에 있었던 네덜란드 정부에 의한 동인도 회사 인수를 통해서— 을 통해서 네덜란드 국가의 소유물이 되었다(in het bezit is gekomen)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을 카이퍼는 "구성부분(behooren tot)이 아니고 '소유'이다(toebehorren aan)"라는 명제로 요약한다(Kuyper, 1879: 958).

즉,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카이퍼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민족들을 식민 모국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에 속하는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보는 듯이 주장하는 허구적 논리[6]를 배제할 수 있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현상유지적 논리로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유지적 논리, 특히 식민지를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소

6) 예컨대 일제가 내세웠던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 주장도 그런 논리의 일종이다.

유물로 보는 논리는 『반혁명의 정치학』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 개인의 삶에서도 사람은 그 개인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종종 그가 입는 옷이나 그의 가재도구의 소유자로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그의 소유물 혹은 소유 사이에 언제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7]

이와 같이 식민모국을 주체로, 식민지를 주체의 소유 대상이 되는 객체로 보고 있으므로 그 둘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강령』과 『반혁명당의 정치학』 모두에서 식민지 정책을 다룬 장(章)의 제목이 '국가의 해외 소유('s rijks bezit overzee)'로 되어 있다. 더욱이, 그는 기독교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그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으며, 서양 열강에 의한 해외 지배가 대부분 정복욕과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지역의 발전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들의 더 높은 상태로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열강의 식민지 개척과 지배 일반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8]. (Kuyper, 1908: 193(1897년 11월 18일 하원에서의 연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자신의 기독교적이면서, 유기체적 민족관으로부터 식민지 정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도출해 낸다. 그것을 집약한 다음의 중요한 단락을 보자.

> 민족적 삶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곳, 그래서 유기적인 국민결합체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혁명당의 원리로부터 그 어떤 요구도 제기되지 않는다. 그 원리가 요구하는 바는 오로지, 당신들이 국민과 민족의 형성을, 창조주의 섭리 아래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들의 독립성과 독특성 속에서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속성상 융합시킬 수 없는 것을 혼융(混融)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로부터도 손을 떼는 것이다. 또한 그 원리가 반대하는 것은 다만, 당신들이 인간인 주

---

7) Ook in het persoonlijk leven kan men zeggen, dat iemand niet alleen in zijn persoon optreedt, maar als persoon tevens bezitter is van 't gewaad dat hij draagt en van het goed dat hem als huisraad dient, ... Dit neemt echter niet weg, dat er tusschen den persoon en zijn bezit of eigendom altoos een principieel onderscheid overblijft.(Kuyper, 1917: 585)

8) 이 발언은 수마트라 북부의 아체 지역에서의 전쟁에 관한 그의 연설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 연설에서 그는 어린 나무는 힘을 주어 굽힘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게 할 수 있으나 10수년을 이미 자란 나무는 그렇게 할 수 없음에 빗대어 식민지 정책이 '역사의 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에 이 국민들의 미래를 주관하는 권한을 하나님의 손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주권의 관리와 보존을 제외하고는 당신들 왕국과의 모든 잘못된 혼합을 단호히 포기하여, 당신들의 재정적 이익이 이들 국민들의 도덕적 이익을 방해하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할 때에, 그 원리는 충족되는 것이다.[9]

여기서 카이퍼가 제시하는 원리는 식민지 민족들의 특성에 대한 존중, 그들의 미래 결정에 대한 개방적 자세, 그리고 모국의 재정적 고려에 못지 않는 윤리적 고려의 중시로 요약된다. 이 중 앞의 2개는 민족의 형성과 미래를 섭리적으로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마지막 원리, 즉 재정적 이익 때문에 도덕적 관점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그러한 기독교적 신앙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원칙은 1901년 국왕시정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하는 '윤리적 정책'의 개혁주의적 연원(淵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의 식민지 보유의 근거를 논한 카이퍼는 정책의 근본적 입장으로 '후견인' 역할(voogdij)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일로 세 가지, 즉 착취(exploitatie), 식민화(kononisatie), 그리고 후견(voogdij)을 제시하고 있다. 착취는, 직접적으로 무력을 통해서 공물을 받아들이거나, 간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제도라는 외관을 빌려서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그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식민은 지배자 민족이 그들의 특성에 맞는 토지와 기후를 찾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카이퍼는 착취는 십계명 중 제 8 계명(도적질 하지 말라)과 제 6 계명(살인하지 말라)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로 판정한다. 특히 한 개인을 노예화 —신체의 자유를 빼앗고 노동의 대가를 이전하도록 강제함— 하는 것이 6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민족을 노예상태에

9) Waar geen eigen nationaal leven wortel schoot en dus geen organisch volksverband bestaat, heeft het Antirevolutionair beginsel ook geen eisch te stellen. Dat beginsel wil alleen, dat ge de formatiën der volkeren en natiën, gelijk die onder het bestel van den Schepper geworden zijn, in heur zelfstandigheid en eigenaardigheid zult eerbiedigen, en uw hand af zult houden van elke poging tot ineensmelting van wat krachtens zijn aard onversmeltbaar is; komt er slechts tegen op, dat gij, als mensch, het recht om over de toekomst dier volkeren te beschikken, aan God uit handen zoudt nemen en is dus voldaan, indien, behoudens de handhaving en waarborging van uw hoogheidsrechten, slechts zoo beslist van elke valsche vermenging met uw eigen rijk worde afgezien, dat nooit of nimmer uw finantieel belang aan het moreel belang dier volkeren in den weg sta.(Kuyper, 1879: 955)

처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집단적, 구조적 착취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편 식민화는 모국에 충분한 과잉인구가 있고, 이 과잉인구들 가운데 모험정신이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네덜란드의 객관적인 상황이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10]. 따라서 '후견' 만이 기독교적인 정책의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때 후견이란 식민지의 원거주 민족들을 미성년 지위에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며, 이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피후견인을 도덕적으로 양육하는 것, 둘째는 후견대상자의 재산을 그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관리하는 것, 셋째는 미래에 자립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 도덕적 양육과 관련해서 카이퍼는 '기독교화(基督敎化: kerstening)'가 반혁명당의 식민지 관련 정책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우리의 강령』의 해당 부분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Kuyper, 1897: 969-975). 그러나 기독교화만으로 반혁명당의 식민지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행정, 사법, 조세 등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모두 앞에서 든 후견인의 둘째 및 셋째 의무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카이퍼가 생각했던 것들이라 하겠다.

IV. 보수파와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이상과 같은 후견인론의 입장에서 카이퍼는 보수파(경작체제)와 자유주의자(개방, 자유방임)들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한다. 이 비판을 통해서 카이퍼가 식민지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정책 일반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10) 카이퍼는 자신이 제시한 '식민'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로 영국인의 아메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 식민, 네덜란드인의 남아프리카 지역 식민을 들고 있다.

1. 경작체제 비판

보수파의 경작체제에 관해서 카이퍼는 그것이 도입되던 당시의 시점에서는 파산 위기에 몰린 네덜란드의 정부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긴급구조수단이었다고 평가한다(Kuyper, 1917: 579).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은 크게 윤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판의 초점은 경작체제의 도입이 가지는 강제성과 급진성에 맞추어져 있다. 첫째, '강제노동'으로 재배된 산물에 대한 '강제가격'이라는 방식에 기초한 불법적 착취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같은 비판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경작체제로부터의 수입이 네덜란드 정부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한 도덕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카이퍼의 특유의 식민지관이 다시 나타나는 비판은 두 번째 것인데, 그것은 경작체제가 원거주 민족들의 사회에 강제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 ...왜냐하면 그것[경작체제의 원리를 말함]이, 강제를 통해서, 한 민족의 사회적 상태에 대한 강압적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인데,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럴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런 사업을 행하는 자는, 민족의 삶(volksleven)이라는 유기체 전체를 거기에 자연적으로 내재한 삶의 법칙으로부터 감히 떼어내려는 것이며, 민족적 수레(조직 raderwerk)의 중심 축을 강제로 틀어놓는 것이며, 따라서 극한의 정도로, 매우 깊이 침투하는 혁명[강조 원문] 행위를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 반혁명 진영에서는 반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11]

즉, 어느 민족이든 고유의 삶의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그 질서를 급격히,

---

11) overmits het een gewelddadig omzetten, door dwang, van den socialen toestand eener natie beoogde , als waartoe geen mensch , met wat autoriteit ook bekleed, het recht heeft of ooit kan hebben. Wie zulk een ondernemen bestaat, vermeet zich toch, geheel het organisme van het volksleven te onttrekken aan zijn natuurlijk inwonende levenswet; zet gewelddadig de spil, waarop het nationale raderwerk loopt, om; en pleegt derhalve in de hoogste mate een daad van zeer diep ingrijpende revolutie, waartegen op antirevolutionair terrein plichtshalve dient gereageerd.(Kuyper, 1879: 966)

폭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혁명이므로, 반혁명적 입장에서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카이퍼가 사회 질서 및 그 발전에 대해서 유기체적이고 점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식민지 원주민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그는 역사를 통해 형성된 인간집단의 질서를, 그것이 가지는 인간의 죄로 인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한 것으로 보고, 그 변화에 있어서도 구조적이되 점진적 접근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카이퍼는 경작체제가 식민지에서 민족적 삶의 자연적 발전과정을 만회하기 힘들 정도로 망쳐 놓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밖에도 경작체제가 현지 상위계층의 하위계층 착취를 부추겼고, 식민지 관료기구를 공권력의 집행과 일종의 기업활동의 관리자라는 '부자연스러운 혼합 상황'[12]에 빠지게 하였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끝으로 경작체제가 네덜란드 국민의 양심을 둔화시키고, 황금에 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식민지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부여받은 소명(roeping)에 대한 감각이 점차 약화되게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Kuyper, 1879: 967)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작체제에 대한 비판은 카이퍼가 경작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식민지에서의 수취체계의 구상에서 나타난다. 그는 이것을 산업적 부담에서 공법적(公法的) 부담으로의 전환(een conversatie van een industrieelen in een publiekrechtelijken last(Kuyer, 1879: 981: 강조는 원문))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그는 경작체제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수취하는 수입에는 다섯 가지 경제가격 범주, 즉 농지 임차료, 임금, 가공료 및 운송료, 자본임대료, 그리고 토지-영업-산물에 대한 조세가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의 구상의 핵심은 이렇게 혼합된 것을 분리해내고 조세는 조세로서(belasting als belasting)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균일한 토지세를 부과하고, 원주민 촌락관리자(dessah-hoofden)가 그 일정비율을 수취하게 하고, 기존의 강제노역은 금납화(afkoopbar)하고, 본국과 식민지 운송에서 네덜란드 선박을 통한 운송에 대한 과세부담을 철폐하는 것 등이었다(Kuyper, 1897: 982). 이와 같은 제안은 플랜테이션의 경작, 수확농산물의 가공, 운송 등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장악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던 체제를 지양하고, 정부는 토지에 대한 균일하고 광범위한 조세부과를 통해 재정수입을

12) 오늘날의 용어로는 '이익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될 것이다.

확보하고, 경제활동을 보다 민간의 자율과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3]. 주목할 점은 카이퍼가 이러한 변화가 생산량의 증대와 가공된 작물의 가공품질 향상을 통한 수취 단위 가격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작체제에 동원되던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다른 활동에 투입가능하게 되고, 정부의 실질 재정수입도 유지되는 가운데[14], 투자된 민간자본에 대해 충분한 수익(rente)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카이퍼는 이와 같이 정부의 조세가 조세로 분리되고 강제적 경작과 강제적 노역이 제거되어 생산성이 증대되면, 모든 식민지의 토지의 영소작(永小作: erfpacht)화 과정을 거쳐 마침내는 좋은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그 수입으로 네덜란드 정부의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뒤집어 보면, 정부의 생산활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강제노역, 강제가격이 식민지의 경제적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본의 수익성과 정부재정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작체제에 대한 카이퍼의 비판이 강제가격, 강제노역의 비윤리적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유인(誘因)의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에도 미치고 있는 점은 그가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통찰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2. 자유주의 경제정책 비판

『우리의 강령』을 출간하던 시점에서의 카이퍼의 비판은 주로 경작체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이 밝혀져 있다. 카이퍼는 자유주의 정책이 그 이전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의 본질이 유럽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창출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13) 카이퍼는 실론 지역에서 이미 이러한 성과가 검증되어 있다고 쓰고 있다.

14) 이는 오늘날 재정학에서 조세체계의 변화를 논할 때 흔히 고려하는 수입중립성(revenue neutrality)를 의미한다.

이같은 반보수적 식민지 정책 역시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정책은 정책수단을 통해 우리의 현대적, 자유화된 사회의 개념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민족의 삶의 줄기에 접붙이려는 시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15]

여기서 볼 수 있는 비판의 전제는 그가 보수파의 경작체제를 비판했던 것과 동일하게, 역사를 통해 형성된 고유의 특징을 가진 '민족의 삶(volksleven)'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것을 시도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후에 카이퍼는『반혁명당의 정치학』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정책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고전파 경제학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다[16]. 그의 비판의 근거는, 자유주의적 정책이 도입된 후 급격히 확대된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내에서의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자유주의가 전망했던 바와는 다른, 유럽 하층민의 비참한 삶과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자신의 유기체적 사회관이다. 이에 따라서 식민지에서도 고전파의 원자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정책이 지양(止揚)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유기적 연결이 여러 측면에서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해 교란되었다는 것, 그러나 다시 그 연결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식민지 영역에서도 모든 연대를 해체하는 원자주의에 대한 유기적 저항을 행해야 한다는 점이다.[17]

즉,『우리의 강령』에서 자유주의 정책 비판의 중점이 유럽의 자유주의적 사회요소를 토양이 전혀 다른 사회에 이식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에 있었다고 한다면,『반혁당의 정치학』에서는 그 비판이, 그의 유기체적-역사적 사회관과 대립하는, 자유주의의 핵심적 전제인 원자론(原子論)적 사회관 자체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이론적, 원리적인 비판 이외에도 그 실행에서 나타

---

15) En te minder kon deze anti-conservatieve koloniale politiek slagen wijl ze gepaard ging met het streven, om, door bestuursmaatregelen, de begrippen van onze moderne, geliberaliseerde maatschappij te enten op den stam van een geheel andersoortig volksleven.(Kuyper, 1879: 968)

16) 카이퍼는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파 경제학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 걸쳐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가 고전파 이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Kuyper, 1917: 583)

17) En al viel nu het feit niet te loochenen, dat deze organische samenhang veelszins door egoïsme en materialisme verstoord was, toch moest er altoos weer op aangehouden, en vandaar dat ook op koloniaal gebied het organisch protest tegen het allen band loswikkelend atomisme moest uitgaan.(Kuyper, 1917: 583)

난 문제점도 지적되는데 식민지 플랜테이션의 관리경영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자본으로 바뀌었을 뿐 강제 조달에 입각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Kuyper, 1879: 968), 기업들의 이윤추구 활동이 현지인들을 궁핍화시키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Kuyper, 1917: 584). 또한, 민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들의 무능을 핑계로 저임금의 중국인 쿨리들을 유입시켜서 자바인들에게 돌아갈 임금을 통한 소득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Kuyper, 1908: 551(1900년 11월 22일 하원에서의 연설), Kuyper, 1917: 584)

V. 후견인 역할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한계

앞에서 카이퍼가 보수파와 자유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카이퍼가 내세운 후견인 역할의 보다 구체적 목표와 수단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그가 추구한 후견인 역할의 목표는 식민지 원주민에 의한 산업화였으며, 이것이 식민지의 자립적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카이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작체제는 물론 민간자본의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려는 자유주의적 식민지 정책에도 비판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민간자본을 통한 산업화가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하나의 '단계'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Kuyper, 1908: 550, 같은 연설) 늦어도 1900년 경에는 이러한 단계론적 사고의 틀 속에서 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식민지에서 '산업화' 단계가 '필요'했다는 생각과, 산업화 단계 이후의 단계로서 그가 말한 후견인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올 수 밖에 없다, 또는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단계의 핵심은 식민지 원주민 스스로에 의한 산업화를 통한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의 발전이었으며, 그들 안에 내재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었다.

> 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산업적**[강조는 원문] 시대는 이미 제 3의 시대, 즉 식민지 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강조는 원문] 평가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대로 대체되는 중이며 신속하게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고 믿는다....[중략]...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도움은, 자본을 그리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민간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구도에서 배타적으로 찾

기보다는, 그러한 산업이 원주민의 경제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에서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자신들의 산업이 재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중요해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민들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발전을 위한 동력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18]

카이퍼는 자바인들의 경우 이미 섬유산업에서 그러한 발전의 단초가 될 수공능력이 입증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와 같이 식민지 원주민에 의한 자립적 산업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식민지 내에 유럽 민간자본에 의한 산업만이 존재할 경우, 네덜란드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인도네시아를 궁핍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윤을 얻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는 점이다.(Kuyper, 1908: 551-552, 같은 연설) 이러한 인식에서 그는 원주민들의 산업 부르주아지로의 발전이 필요하고 여기에 정책이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중 가장 고귀한 것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Kuyper, 1917:593)

그렇다면, 이런 식민지 원주민 스스로의 산업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카이퍼는 보았는가? 그는 자립적 산업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교육기관의 설립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현지화였다. 그는 교육자도 가능한 한 현지 출신으로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기관들도 현지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색채(tint)'를 띠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현지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동양인들은 산문적(prozaisch)으로가 아니라 운문적(poetisch)으로 성장하며, 그 성장은 단연코 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그의 환상(phantasie)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논했다(Kuyper, 1917: 594). 이것은 호의

18) Ik geloof dan ook. ...[중략]..., te kunnen profeteeren, dat de industrieele periode, die wij thans doormaken, reeds bezig is vervangen te worden en spoedig geheel vervangen zal worden door eene derde periode, waarin de sociaal-oeconomische opvatting van het koloniaal beleid op den voorgrond zal treden...[중략]...Dan zal de redding voor Indië minder uitsluitend gezocht worden in het denkbeeld, er kapitaal heen te brengen en er particuliere nijverheid te ontwikkelen, dan wel in de vraag, welken invloed deze nijverheid heeft op de oeconomische ontwikkeling van den inlander. Dan zal vanzelf de vraag aan de orde komen, hoe de nijverheid van den inlander zelf weer zal kunnen opleven en zal vooral op de dynamische kracht, die in de bevolking daarvoor schuilt, het oog worden gericht.(Kuyper, 1908: 551, 같은 연설)

적으로 본다면 카이퍼가 동양인들의 인지성장은 논리중심적이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이퍼의 그러한 동양인 이해는 그들에 대한 추상적 개념의 교육을 무익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연결되었다. 즉, 그는 식민지에서의 교육은 단 한 순간도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추상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모든 추상은 동양인의 정신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Alle abstractie is bij den Oorsterling voor zijn geestelijk besef dood)'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즉, 그는 현지화된 서양인 또는 가능하면 현지인에 의한, 식민지 현지인들의 필요에 밀착된 교육을 강조하였지만, 그 교육은 실용적, 현지적 지식에 국한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 이외에, 카이퍼가 그의 저작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식민지 정책 수단으로는 지역 자치기구(Gemeenteraden)의 육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카이퍼는 매우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현시점의 네덜란드의 자치기구가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것임을 역설하면서, 식민지의 지역 자치기구는 네덜란드의 15, 16세기의 자치기구를 모델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Kuyper, 1917: 597). 이렇게 해야만 자치기구가 인도네시아 특유의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자치기구는 대도시에서만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구성에서는 전체 인구면에서는 소수라 할지라도 유럽인들이 현지인들보다 다수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와 같은 그의 입장을 볼 때 그가 식민지는 역사의 발전 단계상 뒤쳐져 있다고 보았고, 그들의 발전은 네덜란드가 갔던 경로를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유럽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퍼는 이와 같이 제한된 자치기구를 통해서도 지방재정, 보건, 도로, 건축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과도한 중앙집중적 관료제'의 껍질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Kuyper, 같은 곳) 희망을 표명했다. 이와 같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분권화와 점진적, 상향적 변화를 중시하고 집중화와 급진적, 하향식 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은 카이퍼의 정책 여러 분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그의 영역주권론과도 친화력이 강하다[19].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식민지에 대한 윤리적 정책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던 다른 정파와 구분되는 반혁명당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다.(de Jong, 2001: 178)

19) 예를 들어 이명헌(2011)은 이러한 특징을 노동문제에 대한 카이퍼의 해법 속에서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카이퍼의 후견인론에 입각한 정책의 틀은 식민지 원주민들의 자주적 산업화라는 매우 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계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첫째, 즉, 그의 '후견'의 입장은 식민지 원주민들의 정치적 독립을 구체적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다. 위에서 그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강조한 교육과 지방자치 기구의 육성책도, 그 추구하는 바가 제한적이고 매우 점진주의적이었음을 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그 두 가지 구체적 정책수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네덜란드의 후견인 역할 전체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는 특징이었다.

> 후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소명을 아무리 탁월하게 표현해 준다 할지라도, 여기서 심각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후견은 일상적으로는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부과되지만, 단, 매우 제한된 연수 동안만 그러하다...[중략]... 반면, 여기서는[20] 그것에 반해 그런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중략]... 역사적 결과만이 그 한계를 정할 수 있으며...[21]

카이퍼는 그러한 '역사적 결과'의 예로써 스페인령 아메리카 지역이 여러 공화국들로 독립했을 때처럼 봉기가 일어나거나, 다른 강국이 네덜란드의 지배권을 빼앗아가는 경우를 말하였다. 이렇게 보면, 네덜란드의 후견인 역할은 식민지의 원주민 사회의, 정치적 독립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보다 높은 단계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면서도[22], 언제 그 피후견인을 독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한다'는 미온적이고 다소 모순된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카이퍼는 식민지에 대한 네덜란드의 '소명'을 말하였지만 그 소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비유컨대 편익이 비용을 넘는 한도 내에서 추구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우리의 강령』에서 그는 후견인의 사명을 네덜란드가 감당할 것인

---

20)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말함

21) En toch, hoe uitnemend dit woord voogdij onze roeping ook moge uitdrukken, toch zij men hierbij tegen ernstig misverstand op zijn hoede.Voogdij in het gewone leven is een taak, die van rechtswege op iemand gelegd wordt, doch slechts voor een zeer beperkt aantal jaren. ...Hier daarentegen is van zulk een tijdsbepaling geen sprake. ...Alleen de historische uitkomst zal hier de grens kunnen bepalen,...(Kuyper, 1917: 580-581)

22) 이 점도 카이퍼는 분명히 하고 있다.(Kuyper, 1917: 581)

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명 수행에 따르는 부담(군사적 비용, 행정-교육-산업적 필요를 위한 본국 자원의 배분, 각종 분규에 의한 손실의 가능성)과 그 수행에 따르는 이익(직접적 식민지 영역의 소유, 과잉인구의 배출구, 번영을 위한 물질의 간접적 공급원 확보)을 열거한 후, 후자가 전자보다 적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고상한 목표를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할 열정이 없다면 거기서 일찍 손을 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uyper, 1879: 976) 또한, 『반혁명당의 정치학』에서도 후견인이 그 후견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이상(理想)을 식민지 정책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네덜란드로 하여금 식민지에서의 지배와 감독을 계속하도록 하는 유인(誘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uyper, 1917: 581). 이같은 생각은 네덜란드의 입장에서 '편익'을 초과하는 '비용'지출을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반 데벤터의 '명예부채'의 개념을 카이퍼와 반혁명당의 식민지 정책의 실제 책임자였던 이덴부르크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던 것(de Jong, 2001: 167)도 바로 이런 기본적 입장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카이퍼의 저작과 연설을 통하여 그가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어떤 사고(思考)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카이퍼가 식민지 정책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여러 수준에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형성하는 정치체계의 단일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나님이 각 민족의 형성과 미래를 섭리적으로 주관한다는 신앙, 민족을 유기체적 단위로 보는 입장,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영역주권론적 이해가 그의 식민지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정당화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식민모국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카이퍼는 죄로 인해 세계적 단일국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각 민족의 형성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네덜란드와 식민지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의 역사 중시 관점은 동시에 식민지를,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본국의 소유대상으로 보는 현상유지적 사고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가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대해서 행하여야할 바람직한 정책, 즉 이른바 ‘윤리적 정책’의 개념을 정하기 위해 제시한 원칙은 ‘착취자가 아닌 후견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틀 속에서 중상주의적이면서 직접적 착취체계였던 경작체제와 자유주의적 식민지 정책 양자를 비판하였다. 특기할 점은 그같은 비판이 윤리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차원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작체제에 대한 비판에서는 정부의 직접적 생산활동에 대한 개입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경제적 유인에 대한 그의 통찰이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유주의적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카이퍼는 그의 유기체론적인 사회관에 입각하여 자유주의적 고전파 경제학의 원자론적 세계관을 비판했으며, 자유주의 정책으로 초래된 자원 약탈의 문제점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후견인론으로부터 식민지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서 식민지 원주민들 스스로의 산업화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교육과 자치조직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치조직에 대한 그의 강조는 그가 사회문제를 고찰할 때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주권론이 식민지 문제에도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윤리적 정책’을 위한 의미있는 원칙과 수단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은 식민지의 독립에 대해서는 ‘역사적 결과’가 결정한다고 하면서, 적극적 기준과 시간적 계획을 설정하지 않는 미온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네덜란드 본국의 편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이명헌 (2011). “아브라함 카이퍼의 노동문제관: ‘우리의 강령’과 ‘수공노동’을 중심으로”『신앙과 학문』. 16(3).

De Jong, J. (2001). Ethiek, voogdij en militaire acties, in Kuyper, D.Th. and Schutte, G.J. eds *Het kabinet Kuyper 1901-1905.* Meinema.

Fassuer, C. (2012). De nadagen van de ethische politiek, Voordrecht gehouden bij het symposium ‘Van ethische politiek naar dekolonisatie’ aan de Vrije Universiteit.

Koch, J. (2006). *Abraham Kuyper: een biografie.* Boom.

Kossmann, E.H. (1978). *The Low Countries: 1780 - 19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uyper, A. (1879). *Ons Program.* Amsterdam: J.H. Kryut.

Kuyper, A. (1908). *Parlementaire Redevoeringen Deel 1 Kameradvizen*, Amsterdam: van Holkema & Warendorf.

Kuyper, A. (1917).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Kampen: J.H.Kok.

Kuyper, A. (2007). *Lectures on Calvinism.* New York: Cosimo Classics.

Multatuli, (1860). *Max Havellar.* 지명숙 옮김. (1994). “막스 하뷜라르”. 문학수첩.

Zanden, J. L. and Riel, Arthur van (2004). *The Structures of Inheritance: The Dutch Economy in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ranslated by Ian Cressie (2000). from *Nederland, 1780-1914: Staat, instituties en economische ontwikkeling.* Uitgeverij Balans.

Wintle, M. (2000). *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Netherlands 1800-1920.*: Cambridge.

ABSTRACT

Abraham Kuyper's View on Colonial Policies

Myung-heon Lee (University of Incheon)

This article studies Kuyper's view on the colonial policies and tries to assess the influence of his christian world-view on this specific domain of politics. On the ground of his notion on God's providence in history, he rejected the idea of political unification of the Netherlands and the colonies, while rationalizing the owner-proper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is organic view of the society enabled him to criticize both the cultivation system (cultuurstelsel) of the conservative and the 'laissez-faire' colonial policies of the liberal. His critic on his political rivals is noteworthy from both eth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The 'guardianship' which he advocated as the guiding principle in the colonial policies is to be highly evaluated for its progressive position that supported the industrialization by the natives in the colonies. As for concrete measures to achieve this goal, he emphasized education and the gradual development of their self-government. His position was, however, lukewarm concerning their political independency because he avoided setting concrete criteria and time schedules for their liberation, while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keeping the cost of the 'guardianship' under the benefit..

Key Words: Kuyper, colonial policies, sphere sovereignty, guardianship (voogdij), economic policies, cultivation system (cultuurstelsel)